

## 240201 (목) 신문 모니터링

발제자 문지수

### > 미디어 비평

#### [미디어스] 방통위, 2023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대상은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으로 탈락 사업자는 없었다.

#### [한겨레] 2인체제 방통위, MBC 재허가하며 “시사프로 공정성 개선방안 반영”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특히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재허가 조건과 관련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은 지상파 방송사가 추구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기존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던 취재보도윤리 위반 방지 사항을 조건으로 상향해서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문화방송(MBC)을 겨냥해 “방송의 공적책임과 관련해 디티브이 등 재허가 신청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인사다.

#### [경향] ‘2인 체제’ 방통위, MBC에만 ‘공정성 확보 계획서’ 요구...‘바이든-날리면’ 보도 겨냥 “분쟁 관리 준법 계획서 내라”

방통위가 내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에서는 ‘공정성 제고’ 방안 확보가 두드러진다. 방통위는 한국방송(KBS), MBC, SBS와 지역 민방, 지역 MBC, YTN 라디오에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제고 및 취재 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해 취재 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고, 내부 규정을 위반한 종사자 등에 관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한 세부 방안도 오는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MBC를 대상으로는 공정성·객관성 확보 관련 별도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올해 MBC DTV(본채널) 등 재허가 신청 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 [미디어오늘] 방통위, SBS 재허가 조건에 ‘소유경영 분리’ 제외했다

방송통신위원회(김홍일 위원장)가 TY홀딩스가 대주주인 SBS 재허가 심사 결과 이전과 달

리 소유 경영 분리 조건과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에 권한을 부여한 조건을 제외했다.

3년 전 재허가 때 조건으로 부과된 'SBS 경영 투명성 확보와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가 제외됐다. 또한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열회사와의 SBS 콘텐츠 수익 배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SBS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간 이전거래 가격의 타당성에 대해 종사자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칠 것 △SBS와 SBS 최대 주주는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SBS 종사자대표와 함께 자회사 개편계획 등을 포함한 SBS지배구조 개편계획을 성실히 협의할 것 등도 제외됐다.

### **[미디어오늘] 한동훈의 운동권 청산론, 어떻게 봐야할까**

운동권 청산론은 정부 여당이 내세운 일종의 프레임이다. 야당을 운동권이란 틀로 가둬 고립시키는 전략의 일환이다.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심판론으로 구도가 굳어지면 정권심판론 대상이 희석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사활이 걸린 것처럼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으로 격을 올리려는 움직임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

운동권 청산론을 시대정신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표 공천에 힘을 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전략공천 대상자가 호응하고 이를 언론이 확산시켜 자연스레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운동권 청산을 말할수록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공천도 함께 언급될 수 밖에 없다.

운동권 청산론 대 정권 심판론 구도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 흐름도 대세가 되고 있다. KBS는 30일 <'운동권 청산론 vs 정권 심판론'...대결 구도 윤곽 잡히나?> 리포트에서 "태영호 의원은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과 겨루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고, 앞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 3선의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과 대결하겠다고 나섰다. 야당 후보를 운동권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 **[미디어오늘][아침신문 슈아보기] '고발사주' 유죄, 경향·한겨레 "손준성 검사 윗선 尹·韓 입장 밝혀라"**

1일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은 1면에 손준성 검사의 1심 실형 소식을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1면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의 첫 실형 판결 소식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1심 유죄

### > 내용

-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9월 조성은씨의 제보를 받은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로 시작.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고발해 달라고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
- 고발장 전달, 손준성 → 김웅 → 제보자 조성은
-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손 검사의 혐의 상당 부분 인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문제의 고발장이 선거 전에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고, 언론에 보도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
-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 -언론사별 보도

#### [경향/1면톱] 고발사주 혐의 손준성, 1심서 '실형'

손 검사 혐의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경향/3면] 법원, 검찰이 '총선 개입 의도'로 고발장 대리 제출 시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을 대리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 셈이다.

#### [경향/3면] 기소된 손준성, 윤 대통령·한동훈 밑에서 '영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 보정책관 손준성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장모 최은순씨 등에 대한 여권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전달한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법정에서 나온 전현직 검사들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손 검사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 피고인인 만큼 사실관계부터 법리 쟁점까지 강하게 다투며 공수처와 각을 세웠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증

인으로 나와 "기억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은 안 나는데 추정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 **[경향/4면] '부실·폐지' 입길 공수처 첫 성과..."수사정보 유출"로 승부**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1년8개월 만의 결과이자 공수처 출범 3년 만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수사력 부실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 **[한겨레/1면톱] '피해자 김건희·한동훈' 고발장...검찰총장 핵심참모가 '작성·전달' 모두 인정**

##### **[한겨레/사설] "정치적 중립 위반" 고발사주 유죄, 뒷선 여부도 밝혀야**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뒷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하고 손 검사장만 기소했다. 핵심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만큼 더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손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휘하 검사 여럿이 범행에 관여했다. 또 문제의 고발장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었다. 누가 봐도 뒷선의 지시·교감 없이 수사정보정책관 차원에서 감행할 만한 범행이 아니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에 대해선 충분히 수사하지도 못한 채 무혐의 처분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사 등을 통한 실제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국/1면] "김웅에게 고발장 전달됐다"... 손준성 검사 징역 1년 실행**

재판부는 검찰 내부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판결이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 및 당시 여권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데 활용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 **[한국/3면] 진술 거부에 가려졌던 손준성 존재... '텔레그램 발신자'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가 31일 '고발사주' 의혹에 실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검사와 정치인의 공모 관계를 보여주는 '물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증거는 다름 아닌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 주고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의 '발신자 텔레그램 ID'가 손 검사장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연결된 계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적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손 검사장의 관여 여부가 조씨 휴대폰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검색 기록 또한 손 검사장의 발목을 잡았다. 임 검사와 성 검사가 1차 고발장이 전달된 날 지씨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했는데, 실명 판결문은 수사 기관 등에서만 확보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 검사장이 1차 고발장과 함께 전달한 실명 판결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맞다고 봤다.

### **[한국/3면] '검찰권 남용' 지적인 법원... 당시 총장이던 윤 대통령 역할 재조명**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 **[한국/사설] '고발사주' 유죄, 검찰의 정치 중립 위반에 엄중한 경종**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발생한 일로,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 **[동아/12면]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정면위반"**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은 물론이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 일부를 작성 및 검토했고,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에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설령 제3자가 있었다고 해도 전달책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은) 최소한 공소장을 써 본 사람이 작성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장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모두 수궁하기 어렵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했다.

### **[조선/10면] 손준성 징역 1년... "검사가 정치 중립 위반"**

앞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질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게이트'로 몰아갔다. 공수처는 시민 단체 고발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손 검사장과 김 의원에게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다. 이후 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상대로 체포 영장을 한 차례, 구속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또 김 의원에게 대한 공수처의 압수 수색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에 근무했던 검사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 **[중앙/10면]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 1년...법원 "정치중립 위반 시도"**

### **[중앙/사설] '고발 사주' 손준성 징역형, 검찰 중립 다시 도마 위에**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손 검사장의 범행 의혹이 드러난 이후 전개된 상황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손 검사장은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비록 유죄판결이 나오기 전이었으나 누가 봐도 무리한 인사였다.

그런데도 승진을 강행했으니 검찰이 국민의 판단과 정서를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니 검찰이 늘 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아닌가.

## > 세수 핑크

### >내용 요약

-기획재정부 '2023년 국세수입 실적'

-연간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전년보다 국세 51조 9000억원 줄어

-경기 악화(법인세) + 부동산 경기 침체(양도소득세) + 소비 위축/수입 감소(부가가치세)  
+ 유류세 한시 인하 + 세제개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 50조원가량. 세수 결손액의 약 89%.

### [경향/1면톱] 세수 핑크 역대 최대

#### [경향/2면] 경기 둔화 속 부자 감세...올해 세수 전망 더 캄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핑크가 난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둔화 국면 속 포퓰리즘 감세가 맞물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전보다 강한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 등을 통해 내놓은 크고 작은 감세안만 10여건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만 7조원에 달한다.

정부 감세 정책의 특징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63조5000억원에서 올해 77조1000억원으로 2년 만에 21.4%나 늘어났다. 조세지출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등 조세특례를 통한 세금 감면을 뜻한다.

이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은 2022년 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7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6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고소득자(연소득 7800만원 초과)의 감세 혜택은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15조3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한겨레/1면] 역대 최대 세금 56조 덜 걷혔는데...선거용 감세 부채질 계속

총선을 앞둔 '감세 드라이브'가 세수 부족을 부채질해 향후 재정 운용에도 차질을 빚을 거라는 우려가 크다.

정권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핑크(최종 예산안 기준)가 발생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에도 5월 추가경정예산 편

성을 하며 세수 전망을 한차례 수정했음에도 약 7천억원의 핑크가 난 바 있다. 추경 이후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 **[한겨레/4면] 4분기 성장 '정부 기여도 0%p'...세수핑크에도 줄감세, 돈이 없다**

지난해 역대 최대인 56조4천억원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일차적으로 정부가 경기 예측에 실패한 탓.

특히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포인트'였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예산상 예정된 지출을 쓰지 못하는 불용 규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말에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상 막판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려 경기를 방어하기 때문이다. 4분기 기준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0%포인트인 건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처음이다.

#### **[한겨레/사설] 최악의 56조 세수핑크,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정부는 이런 사태를 빚고도 올해 또 감세 조치를 남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전년도에 견줘서도 51조9천억원이나 줄어든 국세 수입을 경기 탓으로만 돌리는 건 솔직하지 못한 일이다.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세수 결손을 키웠다. 정부는 또 세수 결손을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지 않고, 국회가 의결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대거 줄였다. 재정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세수핑크 우려가 나올 때마다 하반기 경기가 좋아져 관찮을 거라는 상저하고론을 퍼거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땐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낙수이론을 폈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 결손은 현실이 됐고, 정부 지출 억제로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0%에 그쳤다. 왜 이런 주먹구구 재정운영을 계속하려는 것인지 민생토론회 등에서 직접 감세 정책을 설파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 **[한국/15면] 법인세·양도세 급감에 지난해 '세수 핑크' 56.4조... 사상 최대**

본예산 예상치(400조5,000억 원)보다 56조4,000억 원 적다. 세수 오차율은 14.1%다. 2021년(21.7%)과 2022년(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추계 능력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 **[동아/10면] 작년 '세수 핑크' 56조 역대 최대... 법인세 23조-양도세 14조 줄어**

당초 정부 예상보다는 56조4000억 원이 적어 사상 최대의 '세수 핑크'가 현실화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연간 세수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 수입 예상치는 정부보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부의 최신 경제 전망을 감안하면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 감세 정책들이 올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사설] 사상 최대 세수 핑크에도 '묻지 마 공약' 쏟아내는 與野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현금성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 수원시를 찾아 전국 주요 구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민간 투자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녀 출산 시 목돈을 분할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무상화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원은 향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밀어붙이는 SOC 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주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시켰고 20조 원 규모의 '수원 군공항 이전', 부산·울산·경남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법안도 줄줄이 심사 중이다. 지역 표심을 노린 '묻지 마' SOC 사업이 줄잡아 90조 원에 육박한다. 재원 대책도 없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총선용 사탕발림 공약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길 뿐이다.

### [조선] x

### [중앙/14면] 지난해 세수 56조 핑크...나랏빚 내년엔 1200조 넘을 듯

적자가 쌓이면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1109조5000억원)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01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한다. 다만 중앙정부 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하는 추세다. 2020년 전년대비 중앙정부 채무 증가율은 17.2%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1년 14.6%→2022년 10%→지난해 6.6%로 계속해서 낮아졌다. 기재부는 앞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2025년 1200조원을 넘고 2026년 1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 칼럼

### [\[한국\] 혐오를 만드는 정치인 \[박미량의 범죄 속으로\]](#)

실제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극단적 표현은 그 사회의 혐오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위협 가설은 특정집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될 때, 그 집단에 대한 폭력적인 혐오 범죄가 증가함을 예측한다. 특정 성별, 종교, 인종에 대해 긍정적 정책이 집중적인 고려가 될 때, 오히려 이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담성 가설은 특정집단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태도가 그들에 대한 더욱 대담한 혐오 공격으로 이어짐을 설명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기조로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펴자 미국 사회 내에서는 라틴

계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 표현과 공격이 대담해지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은 혐오범죄의 증가를 명확히 경험했다. 흑인, 이민자,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혐오 정치로 누군가는 표와 권력을 얻었지만 국민은 예측할 수 없는 혐오범죄 피해자가 되었고 분열된 사회 속에서 두려워했다. 정치인의 피습을 보면서 가해자가 가졌던 구체적 목적, 가해자가 받을 처벌보다 혐오를 조장하는 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사회 혐오를 만들고 이용하는 자가 바로 혐오 범죄 가해자이다.

[\[중앙\]\[중앙시평\] 예정된 세금 전쟁](#)

[\[동아\]\[김순덕 칼럼\]이재명의 대통령 같은 신년회견](#)

[\[조선\]\[양상훈 칼럼\]尹 집무실 팻말 뒤편](#)

[\[조선\]늙은 세포가 충격에 더 강했다...노화가 죽음의 과정이 아닌 이유](#)

[\[중앙\]\[정재훈의 음식과 약\] 위 건강에 정말 해로운 음식](#)

매운 음식은 위궤양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람의 위는 튼튼하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미 위궤양이나 위염을 앓고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없는 위궤양이 생겨나지는 않는다. 오렌지 주스처럼 유기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셔도 위에는 별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산은 주스 속 유기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산, 염산이다. 그런 산도 버터내는 위가 주스를 마신다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 마찬가지로 빈속에 커피를 마셔도 위를 손상하지는 못한다. 음식과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기 위해 점액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3년 일본에서 8013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 커피를 마시는 것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식도 역류질환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다.

한국인의 위에 가장 큰 적은 매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염, 위궤양, 위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개인용 접시에 덜어 먹지 않고 음식을 나눠 먹다 보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되기 쉽다. 위궤양을 피하고 싶다면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를 피하자.

[\[동아\]사자 vs 코끼리 누가 이길까\[서광원의 자연과 삶\]<84>](#)